

다산포럼

진상 손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나는 지금 독일에 머물면서 이 글을 쓴다. 20년 전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오후 6시가 지나니 대도시인데도 모든 가게가 셔터를 내려서 술이나 음료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나는 “독일은 소비자에게는 참 불편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명색이 노동 연구자였던 내가 순간적으로나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 참 부끄럽다. 소비자인 고객에게 편의와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감정노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과거보다 더 서비가 발전해서 이런 정말 소비자의 ‘천국’이 됐다. 어디에나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어디 가나 ‘고객’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점원은 ‘고객’에게 찍히거나 그와 말다툼을 벌여서 문제가 생기면 해고될 수도 있다. 점원들을 힘들게 하는 게 고용주만이 아닌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화병나게 만드는 것은 ‘갑’인 가맹본부나 납품업체의 횡포는 물론 생매, 무시, 천대, 반말, 폭언, 성희롱 등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진상’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악마적인 방법으로 골탕을 먹이거나 굴욕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자영업자는 “득도(得道)하지 않고서는 그 일 못한다”는 푸념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뺄 나게 만든 진상 손님 최악 10위’도 돌아다닐 정도다. 과거 KBS ‘개그 콘서트’에서 ‘정 여사 코너’가 크게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진상 손님’의 횡포가 어느 정도 심각하지 보여준 단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정 여사’ 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라는 마지막 대사에서 나온 것처럼 귀부인들만이 ‘진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원들과 사실 같은 처지의 노동자·여성·빈곤층이 더 심각한 ‘진상 노릇’을 한다는 데 있다. 그들 자신도 가정에서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일터에서 고용주나 상관으로부터, 거래처의 ‘갑’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 ‘손님’으로서 ‘왕’처럼 권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90년대 이후 ‘풍요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됐다. 백화점과 거리에 있는 화려한 가게들, 방송을 통해 쉽게 전달 되는 상품 광고는 마치 우리 모두가 소비자 회의 환연에 초대받은 당당한 주인처럼 보이게 한다.

백화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고객’ 대접을 받고, 소름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 됐다. 바우만(Bauman)이 말한 것처럼 “거대한 잔치 상 앞에서 맛난 것을 즐기거나, 장차 즐길 것을 상상하는 것은 일상의 고통을 잊게 해 주는 약과도 같다.” 특히, 힘든 현대인들에게는 일상이 고통스러울수록 고객으로서의 왕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불만이 있어도 감히 대들지 못해도, 상점에 가서는 성질 사나운 ‘진상’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불공평할수록, 일상에서의 욕망의 좌절과 소외가 클수록 자영업자나 점원들에게 더 고약한 ‘갑’질을 하려는 심보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대다수 한국인들은 초·중·고, 대학 어떤 과정에서도 단 한 번 노동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자신이 사실 노동자

이면서도, 언제나 그러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자신이 고객으로서 ‘왕’이 되려면 서비스 노동자는 지옥을 맛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볼 기회가 없었다.

대형 유통회사가 서비스 시장을 마구잡이로 포식하고 오직 경쟁력과 성과, 편리함과 신속함을 강조하는 한국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서 전장하듯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고약한 고객에게 ‘진상’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피고용자의 영혼을 파괴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는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핏덩이처럼 상처를 입고서도 “억울하니 출세 하자”고 발버둥친다. 이 ‘진상 손님’ 현상은 바로 한국사회의 불공정한 서비스 시장, 사회적 차별과 노동 소외, 병든 시민사회, 취약한 노동자 의식을 달리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와서 보는 것이지만 독일에서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은 거의 볼 수 없고, 저녁과 휴일에는 물건을 사기도, 식사를 하기도 매우 힘들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진상질’은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곳에서 동네 자영업자나 서비스 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은 덜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것이다.

NGO 칼럼

서울 식민지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전남대 명예교수

4년 전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만났을 때, 내가 광주국제교류센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즉시 “내가 유니버시아드대회 자문을 하고 있어서 자주 광주에 간다.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라”고 해서 매우 놀란 일이 있다. 그 뒤로 이 교수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고 도움도 받지는 않았지만, 광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나는 당시에 전남대학교의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또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소장을 1999년부터 맡고 있어서 외국인, 특히 외국 대학과의 인맥이 적지 않았지만 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 과정에서 외국대학 연결을 위한 자문을 요청받은 일이 없었다. 어떤 직책이었던지는 모르나 그 대학 교수는 여비까지 받아 가면서 광주에 와서 자문을 해 줬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나를 매우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광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서울 사람들이 맡고 있거나 주도한다는 사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예민한 문제에서 실제 사례를 들기는 어렵지만, 학력위주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실추시킨 ‘신경아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런 뒤에도 지금까지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큼직한 지역 행사의 핵심 역할을 서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해서 많은 중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지만, 서울 대행사가 이를 담당했다. 광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의 출신 지역은 광주지만, 서울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 대표적인

예가 ‘노벨상 수상자 대회’다. 수석역을 들며 행사를 했지만, 그 뒤로 다시 방만한 노벨상 수상자도 없고, 네트워크의 중심이 광주가 된 것도 아니다. 행사 자체를 서울 대행사가 진행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돈을 대고 광주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을 빼고 나면 서울 행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광주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던 이들은 “광주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예 무시하지 않는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들의 활동 무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 인맥밖에 없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광주에서 맡은 직책을 끝내면 다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광주에서 일하는 동안 서울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서울로 복귀하면 그 인맥은 자신의 (서울지역) 활동기반이 된다.

비단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만 이런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어느 대학의 소식지는 서울 업체가 편집과 출판을 담당한다. 그래서 소식지에 쓸 인물 사진조차 업체 사

람들이 내려와서 찍는다.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모든 지방에 공통된 현상으로, 부산시청이 발행하는 ‘Dynamic Busan’이라는 영어잡지는 편집·인쇄·영문기사 작성 등의 일을 모두 서울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내가 전남대학교의 국제협력 일을 맡았을 때에도 홍보실에서 영어 홍보 동영상을 서울 업체에 맡겨서 최종 대본을 내게 읽어보라고 했었다. 도무지 말이 안 되기에 하루 품을 내서 고쳐 주면서 서울에 맡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서울 업체에 맡겨야 결과물의 수준이 떨어지지 못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서울에 맡길 것을 고집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국산품을 보호했듯, 광주나 다른 지방들은 지방의 인재를 키우고 업체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호주의에는 부작용이 따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서울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제5의 에너지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자



이성구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력사업처장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겨울철(1월) 평균기온은 0.5℃로 평년보다 1.5℃ 더 높았으며, 최근 5년간 가장 포근한 날씨라고 한다. 전력전문가들은 최저기온이 1℃ 하락할 때 60만㎾의 전력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평년보다 따뜻했음에도 2014년도 통계에는 2회에 걸쳐 최대전력이 경신됐다.

최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 시 예비전력이 500만㎾ 이상 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따라 “이제는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서 벗어났구나”하는 생각에 전기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문화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력소비로 인해 예비력이 낮아짐으로써 적정 예비력수준(500만㎾) 미만이 예상될 경우 정부와 한전에서는 전력수급 비상단계별 대책을 시행하여 모든 국민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력수급비상 단계별 대책을 보면 예비력이 500만㎾미만인 준비단계에서는 선행형 피크요금제(CPP), 적정범위 내의 전압 하향조정, 민간발전기 가동, 주간에도 수요조정제도를 시행한다.

관심단계인 예비력 400만㎾미만의 상황이 발생하면 열병합발전기 전기출력 상향, 공공기관비상발전기 활용을 통해 적정예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예비력이 300만㎾미만인 주의단계에서는 한전과 산업체 간 사전약정을 통해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약정량 이상 감축하는 긴급절전제도 시행과 아울러 전직원이 산업

체 직접부문이나 길거리 현장에서 대국민 절전요청 활동을 하게 된다. 경제단계인 예비력 200만㎾미만에서는 석탄화력 일시 극대출력, 공공기관 자율단전 조치를 한다. 위의 각 단계별 조치를 취했음에도 예비력이 100만㎾미만의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닥치면 불가피하게 순환단전을 시행함으로써 블랙아웃을 예방하게 된다.

위의 조치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동·하계에 전력수급 전망을 함으로써 전력공급예비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공고를 통해 대용량고객들의 에너지사용제한을 하기도 한다.

다행히 금년 겨울에는 정지되었던 신고리 원자력 등 발전기 3기의 가동으로 안정적인 예비전력이 유지되어 에너지사용제한을 하지 않아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상기온·발전기 불시정지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 ‘아차’ 했으면 전국이 블랙아

웃이 될 수도 있었던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는 등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예비전력이 부족해 전력 비상상황을 겪어왔다.

“풍황할 때 아까지 않으면 가난해 진 뒤에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은 당연하며, 에너지 절약 방법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는 것들이다.

겨울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실내 건강온도 18~20℃ 유지하기, 내복입기 등 따뜻한 옷 차림 하기, 개인전열기 사용 자제, 가전제품 구입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 구입하기 등이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이거나 해도 소비전력의 5% 이상이 절약가능하다.

제5의 에너지라 불리는 ‘에너지 절약’,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 실천함으로써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들 ‘일감 몰아주기’ 막아야 中企 살아난다

얼마전 광주일보 기사에 재벌기업들이 편법으로 자회사에 일거리를 몰아주기 하는식으로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것을 정부가 막았다고 하는 내용이 실렸다. ‘일감 몰빵’ 문제를 보고 느끼는바가 크다.

물류 유통 회사를 운영하는 필자로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이어지는 물류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기업이 자회사를 꾸리고, 이 물품운송을 몰아주기 시작했다. 당연히 우리같은 중소기업 일감은 줄어들수밖에 없다. 반면, 대기업의 자회사

들은 실적과 순이익은 점점 커지고, 회사의 주식가치 또한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다.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회사들은 일감 확보가 어려워지고, 특히 중소기업은 이런 물량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재벌 2세, 3세들이 이런 편법으로 수조~수십조원 가치의 회사를 물려받는 경

우가 많은데, 이러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편법 상속을 막는 효과만 있는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이 기회에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공정거래법도 보완돼 중소기업들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정점순·전남 목포시 대양동

社說

잇따른 야권 개혁안,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4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포기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도 29일 국회의원 특권 포기기에 이어 공정한 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방안 제시 등 '3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면서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선택은 신생 정당으로서 기성 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시도이자 새정치 기조의 주요 뼈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6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달 초 '국회의원 특권 내러놓기'와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은

세 번째로, 당내 해산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민주당의 개혁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사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자정과 개혁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파를 불문하고 선거용으로 마구 쏟아냈다가 식언으로 끝났던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번 개혁안도 실천 의지가 없는 '회용'에 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건 자명하다. 해산책을 정치현장에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실행에 옮겨 유권자들로부터 진정성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부터 선언해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민주당은 '폐문'의 위기에 봉착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대로 된 개혁을 통해 비리와 후진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환골탈태를 하는 것만이 민주당의 살 길이다.

대학들 등록금마저 카드 결제 거부해서야

전국 431개 대학 중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대학은 전체의 25.3%에 해당하는 109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동강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신입생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있다.

재학생의 경우에도 나주 동신대만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대학은 광주은행 신용카드 1곳이거나 카드사 2곳 정도만을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입생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재학생들은 별도의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1%대의 수수료를 피하려고 현금 결제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학기당 400만~600만 원이 나 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한

번에 납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학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카드 할부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명백히 불공하다. 그동안 대거 인상시킨 등록금으로는 무엇을 했으며, 일부 카드사에선 무이자 할부로 열어놓고 있지 않는가.

더욱이 반값 등록금이 화두인 마당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1~2%의 인하여 그저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내 속에 대학 등록금은 서민 가계를 옥죄는 가장 큰 요인이다.

등록금의 카드 납부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권이다. 대학들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발전기금만 쌓아 놓을 게 아니라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과 함께 결제방식이라도 다양화해야 한다. 그게 최고의 지성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도리다.

無 等 鼓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봄이 나른하고 봄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르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랬다...”

“둔 한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하고 꽃이 일곱 달 동안”을 한 ‘나’는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달라고 장인에 게 조른다. 하지만 번번히 장인은 밥의 키가 미처 자라지 않았으며 편칭을 부린다.

‘나’보다 십년 아래인 열여섯 살 점순이는 “그저 툴툴하게 생긴 얼굴에 ‘위아래가 명목한 것이 험없이(=영락없이) 감찰 외 같다’. 데릴사위로 들어와 사경 한푼 받지 않고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하던 ‘나’는 어느 봄날, 혼례를 시켜주지 않고 밤낮 부려만 먹는 장인과 바지가 람이를 옮겨잡고 한판 붙는다. 1935년 발표된 김유정(1908~1937)의 단편소설 ‘봄·봄’속 이야기다.

강원도 차악산 인근 산골에 산방(山房)을 짓고 사는 수필가 장문식은 ‘빈산에 노란꽃’이란 글에서 “이른 봄과 늦가를 눈으로 얼룩진 산에는 노란색이 주류이고, 봄 가을은 붉은 꽃, 찬산에 피는

꽃은 희다”고 묘사했다.

생강나무와 유채, 복수초 등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꽃들 대부분이 노란색인 까닭에 대해 “아직 신록이 피어나기 전, 매마른 배경일 때 멀리 보이는 벌과 나비들의 눈에 띄기 쉬운 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꽃색깔은 아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중매쟁이’인 벌과 나비들이 꽃가루를 옮겨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한 조물주의 디자인 인 셈이다.

어느새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낱봄 제주도와 거문도로부터 화신(花信)이 북상하

고 있다. 내장산 기슭에서는 ‘빈산비탈 꽃’이 따사로운 봄별에 꽃망울을 터뜨렸다. 1993년 빈산에서 첫 발견된 이 꽃은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꽃받침잎을 꽃잎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숲속에선 눈에 보일듯 말듯 자라던 크기의 들꽃이지만 온몸으로 서둘러 봄을 맞이하고 있다.

주말에 짬을 내 가까운 산을 찾아 모진 추위를 이기고 세상 밖으로 꽃잎을 내민 ‘봄의 전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 보리라.

/송기동 시화2부장 song@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홍합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600)	(F A X 22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